

“5+2는 광주·전남 소외” 외치더니 사업단장 응모도 안했다

전북서만 2명 접수... 사무소 유치도 불리

광주시·전남도와 전북도 등 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호남' 광역경제권 사업 총괄(재)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장(이하 지원단) 공모에 지역 인사들이 단 한 명도 응모하지 않는 등 지역발전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했다.

광주·전남에서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른 인사들은 모두 단장 공모를 고사한 반면, 전북 지역에서는 2명이 응모, 이 가운데 한 명이 지원단장을 맡게 됐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최근 지원단장을 공모한 결과 총청 1명, 전북 2명 등 3명이 응모했다. 이 가운데 총청인 인사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단장의 연봉은 1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는 이날 전북도에서 근무한 김모씨와 모 대학 교수 등 전북 지역 인사 2명에 대한 면접을 거쳐 이 가운데 1명을 이번 주내 지원단장으로 선임할 방침이다.

그러나 광주·전남 지역에서 공모를 권유했던 인사들은 모두 지원단장 공모를 거부했다. 지역의 한 인사는 “국책사업인 선도산업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현안이라는 점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공모를 권유했지만, 모두 개인사정 등을 들어 고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지원단장이 선도산업 프로젝트 기획·선정, 사업비 집행 등 사업 전반을 집행·총괄하는 직책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자치 지원단장이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할 경우 편중지원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민 김모(45·광주시 동구 운림동)씨는 “지역에 내로라하는 지역 산업 전문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지역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며 “전문가들로서 지역에 봉사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도·전북도 추진할 선도산업과 관련, 이를 총괄할 (재)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이하 지원단) 소재지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호남권 선도산업 담당자들이 최근 지원단 사무소 입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시·도가 '광주'를 내세우며 맞서 전북도가 전북을 고집, 결국 사업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선정권을 일임했다. 이는 지원단이 해당 지역에 상주할 경우 선도산업 추진과 관련, 다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인사는 “정부가 광역경제권을 인위적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결국 우려됐던 갈등조짐이 일고 있다”며 “지역간 양보와 타협이 전제되지 않는 한 선도산업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고사리 손들의 헌화 광주 어동·월곡·금구초교 등 학생 60명이 4일 광주 북구 운동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두 손 모아 5·18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5·18 어린이 학교'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날 5·18 민주묘지 내 어린이 체험학습관에서 직접 만든 조화를 헌화했다. '5·18 어린이 학교'는 5·18 민주항쟁 29주년 기념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녹색성장 동력 해양에 있다 6~7일 서울서 여수박람회 국제심포지엄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3년 앞두고 박람회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오는 6일과 7일 이틀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다.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녹색성장 구현'을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광속준 미래기획위원장, 김병일 여수박람회 조직위 사무총장, 주승용 국회의원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티모시 맥 세계미래학회회장이 '미래 녹색성장 동력으로서의 해양'에 대해, 그리고 피아영 추아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약기구 의장이 '연안 해양 거버넌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동아시아 해양의 지속가능한 미래 해양산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6일에는 강봉균 국회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지원특위 위원들이 여수 박람회의 지속가능한 미래 해양산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다.

특위 위원들은 오현섭 여수시장 등과 함께 여수 신항에 조성되고 있는 박람회 현장과 홍보관을 둘러본 뒤 인근 옹동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여수박람회의 위상을 높이고, 현지를 방문하는 특위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호남권 선도산업 제대로 될까

쥐꼬리 예산에 참여정부 지역진흥사업 복사판

광주시·전남도와 전북도 등 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호남' 광역경제권이 공동 추진하게 될 선도산업이 기대에 못미치는 사업비 지원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호남권'에 올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1천2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선도산업을 추진한다. 호남권 선도산업은 '친환경부품소재'(광기반 융합육성사업·자동차 부품소재 육성사업),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산업·해상풍력산업) 등 4개 산업이다.

그러나 1개 사업당 3년 동안 지원되는 예산은 300여억원에 그쳐 연구개발을 거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한다는 사업 목표 달성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당초 호남권 지자체는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인 '5+2'광역경제권 차원에서 추진되는 선도산업에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져 지역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자체의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국가 추진 선도산업으로 변경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지역산업 진흥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 지자체가 추진해 온 사업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참여 정부는 광주의 광산업, 대구의 섬유산업 등 전국 4대 도시별로 주력 산업을 선정해 연간 300~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책사업인 선도산업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당장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가 사업비를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 '녹색 식생활 지침' 만든다

식생활 교육 지원법 통과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영양 외에 환경과 농식품 산업까지 고려한 '녹색 식생활 지침'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식생활 교육 지원법은 어릴 때부터 건전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가정 등이 식생활 교육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법은 농식품부 장관이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 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을 역시 5년마다 세우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에게 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대한 조사·연구 권한을 주고 국가와 지자체가 농수산물이나 전통 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을 개발해 보급하도록 했다.

또 전통 식생활 문화와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국가와 지자체에 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6월 중 관련 세미나를 열고 민간 차원의 '녹색 식생활 국민운동본부'도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생활 교육 지원법은 이달 중 공포돼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법국가적 차원의 식생활 교육을 벌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녹색성장·정책 소통 홍보 부처별 실적 평가

국무총리실은 앞으로 각 부처 등 40개 중앙행정기관의 녹색성장 및 정책홍보 추진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올해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통해 국무총리가 기관별 핵심과제 성과를 평가하는 특정과제 평가에 녹색성장, 정책소통 및 홍보, 정책관리 역량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올해 각 부처 업무보고 과제 가운데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추진 성과 및 정책확산 노력을 평가하고, 내년부터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 올해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 중 국정운영 기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3개 안팎의 과제를 선정해 정책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국정운영, 정책설명회, 시민단체의 정책지지 확보, 법령 제·개정 실적 등 정책관리 역량도 평가해 나가

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정책소통 및 홍보 실적도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평가분야는 ▲4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선제적 홍보 ▲홍보협의체 운영 및 활용 ▲온라인, 신문, 방송 등 매체활용 ▲대안론 브리핑 충실도 ▲의신보도 대응 및 홍보활동 수준 ▲주요 정책 기획홍보 성과 ▲정책기사 반영도 ▲기관장 홍보활동 수준 등이다.

정책홍보는 참여정부 시절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없어진 뒤 올해 다시 평가항목에 포함됐다.

총리실은 또 일자리창출,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집행 점검이 필요하거나 개선안 도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수시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2009 어린이날 맞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 점으면 좋겠습니다.

민함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즐겁고 남들만 한 열정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민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

광주광역시 광진구 광신로1가길 11 광신대학교

문의처: 062-605-1114 / 대학동 405-1115